

고흥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본격화

섬지역 장거리 물자수송 등 3개 실증사업 10개 기업 참여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나서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고시에 따라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월 지정된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 완화 제도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 지정되면서 고흥군은 드론 시범공역과 항공인프라를 연계해 드론 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드론 기업 유치로 이어져 군 드론 산업 활성화에도 성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도와 고흥군의 지원을 받아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나서며

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드론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행한다. 중대형 급 무인기 비행통합실증, 유인선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에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올해 1차연도 사업은 유인선 장거리 물자수송과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유인선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선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 택배 실증사업으로,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한다.

또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은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 전면 허용을 통해 방역을 실증함으로써, 코로나19 및 가축 질병 바이러스 등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방역 신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할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 실증은 화재현장 등에 투입될 기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드론 실증사업으로, 특별감항증명 절차 완화를 통해 고흥 항공센터, 고흥만 일원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안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번 기회로 고흥 드론센터 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강진경찰서 이전 급물살 신청사 후보지 3곳 선정

조선시대 객사 자리로 문화재 복원을 위해 이전이 요구된 강진경찰서의 신청사 건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읍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강진경찰서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강진경찰서 신청사 신축 이전 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 선정지 1순위는 강진을 평동리 284번지 외 7필지 1만3096㎡이다. 선정 부지 3곳은 모두 평동 IC 인근으로 경찰관서 신·증축 및 국유재산 업무편람에 부합하며 강진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만㎡ 이상 규모이다.

강진경찰서 신축 예산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기존 경찰서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강진경찰서 부지에 조선시대 금룡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사적 유물보존과 금룡관 복원을 위해 경찰서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지난 6월 30일 '강진현 객사 금룡관 복원을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군민 모임'이 결성됐다.

이를 기점으로 강진현 객사 금룡관 복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강진군과 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강진 경찰서 이전 신축 및 강진현 객사 금룡관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부지선정위원장인 이상심 강진군 부군수는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 아닌 역사 문화재 복원과 강진읍의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 이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며 종합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양봉산업 등록 의무화 보성군 31일까지 신청

보성군이 양봉산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또는 혼합 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이다.

미등록 농가가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 확보와 사용자 입구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71곳으로 미등록 농가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하늘숲길 만들고 산림치유 공간 개발 장성 축령산 힐링 여행지로 거듭난다

200억원 들여 산림자원 개발

국내 최대 인공조림 편백숲을 품은 장성 축령산이 국내 대표 치유 여행지로 거듭난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축령산 일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먼저 주목받는 사업은 44억원 규모의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지난 6월 착공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총 860m 규모의 무장애 데크길을 숲속에 만드는 것이다. 무장애 데크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없이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데크 산책로다.

구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최대 10m 높이에 설치돼 걷는 동안 웅장한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위치는 추암리 산24-68 일대로 목교와 전망대, 쉼터 등이 함께 설치된다. 내년 완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성군과 고창군에 걸친 축령산 상부에는 국비 90억원 규모의 산림청 '축령산-문수산 공간재창조 사업(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장성 축령산 388ha와 고창 문수산 110ha 숲을 산림치유 및 체험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공간재창조 사업을 통해 축령산 상부 우물

터에서 장성 치유의숲 안내센터까지 조성되는 무장애 숲길이 하늘숲길과 연결되면 축령산 내에는 약 2.9km의 웅장한 '숲속 데크길'이 완성된다. 막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산림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자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펼쳐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농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편백숲 어울림(林) 치유 여행 프로젝트'를 제안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4년간 국비 포함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1기 활동 모임체 9개팀(118명)을 대상으로 편백숲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콘텐츠 발굴 등을 지원했다. 현재 2기 활동 모임체를 모집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에도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내려질 모습을 미리 고려하듯, 장기적인 안목으로 축령산 개발 국비 사업을 적극 유치·시행하고 있다"면서 "축령산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유·휴양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여수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무실 마련

지원 상담·피해 접수 창구 활용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없는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여수유족회 사무실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10일 망마경기장 1층에서 권오봉 시장과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등 유족회 임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유족회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이 곳은 여순사건 지원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긴 아픔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여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정부에서 해야 할 피해사실 조사, 기

념공원과 같은 후속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 직후 유족과의 대화에서는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해 유족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여수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인 만큼 아직도 많은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유족회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선제적 후속조치로 TF팀을 구성하고 기념공원 조성 위한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등 법적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